
부산 소방행정의 발전과정과 향후 과제

최 종 술 /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目 次

I. 서론	IV. 부산 소방행정의 현황과 실태분석
1.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부산 소방행정의 현황
2. 연구의 방법	2. 부산 소방행정의 실태분석
II. 한국 소방행정의 역사와 발전과정	V. 부산 소방행정의 발전과제
1. 한국 소방행정의 역사	1. 예방적 측면
2. 한국 소방행정의 발전과정	2. 진압적 측면
III. 부산소방행정의 역사와 발전과정	3. 시민협력적 측면
1. 부산소방행정의 역사	4. 소방행정적 측면
2. 부산소방행정의 발전과정	VI.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I.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내용

지난 2004년 6월 1일 정부 역사상 최초로 국가재난관리 총괄 기관인 소방방재청이 출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수행해 왔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재난 예방시스템을 철저히 점검,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일류 소방방재를 구현하여,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재난안전 서비스를 창출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를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욕구에 부응하는 열정있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전문조직으로서 균형잡힌 소방방재 정책 과정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산 소방은 1972년 6월 1일 부산직할시 소방본부가 발족되어 소방본부장이 부산직할시 경찰국장의 소방사무를 인수받음으로써 소방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집행기관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부산 소방은「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소방행정의 본원적 사명을 가지고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크고 강한 부산」을 지향하는 부산광역시 시정구호에 걸맞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한국 소방행정의 역사적 변천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부산 소방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변천을 고찰해 본다. 그리고 부산 소방행정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해 본다. 이를 기초로 향후 부산 소방행정의 발전과제를 예방적 측면, 진압적 측면, 시민협력적 측면, 그리고 소방행정적 측면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내용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소방행정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고찰한다. 한국 소방행정의 역사를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한말기, 그리고 광복이후, 대한민국의 수립의 순서로 살펴본다, 물론 고려시대 이전에

도 소방기능은 수행되었으나, 그것은 기능이 분화된 독립된 소방기구에서 수행된 것이 아니라, 기능이 분화되지 않은 채, 다양한 기능이 통합된 상태에서 일정한 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 소방행정의 발전과정은 소방방재청의 설립을 그 출발점으로 해서 이후 소방행정의 변화를 살펴본다.

둘째, 부산 소방행정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부산소방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광복이전, 광복이후, 부산직할시 승격 이후, 부산직할시 소방본부 발족 이후, 그리고 2000년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부산 소방행정의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셋째, 부산 소방행정의 현황과 실태분석을 분석한다. 부산 소방행정의 현황은 소방인력, 조직, 예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부산 소방행정의 실태는 지난 3년간의 각 부문별 자률을 근거로 하여 분석해 본다. 즉, 지난 3년간 화재부문, 구조부문, 구급부문, 119신고접수 부문의 실태를 설명하고, 분석해 본다.

네째, 부산 소방행정의 발전과제를 논의한다. 향후 부산 소방행정의 발전과제를 예방적 측면, 진압적 측면, 시민협력적 측면, 소방행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해 본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에 의한 연구이다. 문헌연구는 주로 소방학과 관련된 문헌을 조사하여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오늘날 소방학은 크게 사회과학분야인 소방학, 소방행정부법, 소방심리학 등과 실무분야인 화재진압론, 응급처치론, 소방장비론 등, 그리고 자연과학분야인 연소폭발론, 소화설비론, 특수화재론 등이다.

둘째, 소방기관의 내부자료에 대한 분석이다. 현재 소방기관으

로는 소방방재청, 그리고 각 광역시, 도의 소방본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관련기관에서 작성된 내부 보고자료 또는 외부 보고 자료는 본 연구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해석하고, 이것을 정리하여 활용한다. 이 자료는 소방방재청,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및 각 시·도 소방본부 그리고 부산지역 각 소방서등에서 작성한 자료 등이다.

둘째, 인터넷 및 언론의 보도 자료이다. 각 소방기관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소방행정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를 적극적 활용한다. 또한 소방행정과 관련한 주요 방송사의 뉴스 보도자료와 일간지, 인터넷 상의 각종 보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활용한다.

셋째, 질적 연구방법이다. 질적 연구방법론¹⁾에 입각한다. 먼저 질적 자료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분류, 정리한다.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과 설명논리에는 비교설명(Comparative explanations), 전개설명(Developmental explanations), 묘사설명(Descriptive explanations), 예측설명(Predictive explanations), 이론적 설명(Theoretical explanations)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과 설명논리를 활용하여 질적 자료의 분석결과를 설명한다. 특히, 부산 소방행정의 실태분석에 있어서 이와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실태를 분석한다.

II. 한국 소방행정의 역사와 발전과정

1) Jennifer Mason, 1996, 『Qualitative Researching』, London : SAGE Publication.

1. 한국 소방행정의 역사

1) 고려시대 소방기관

방화업무를 담당하던 고려시대 관원은 금화원이다. 금화원은 고려전기부터 수도개성과 각 지방 창고 소재지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 금화원리(禁火員吏)의 제도가 시작된 것은 문종 20년부터이다.

고려사 세가 문종 20년 2월조(高麗史 世家 文宗 二十年 二月條)에 보면, 방화를 담당할 관원과 이속(吏屬)을 두게 하고, 어사대가 때때로 점검하되, 일직(日直)을 빼먹는 자가 있으면 관품(官品)의 고하를 막론하고, 먼저 금고(禁錮)하고 뒤에 알리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²⁾.

2) 조선시대의 소방기관

1422년(세종 4년) 2월 도성 안팎의 순번(巡番)을 위해 두었던 성문도감과 1426년 2월 도성 안의 소방기관으로 두었던 금화도감을 합쳐 수성금화도감을 설치했다. 1460년(세조 6년) 5월 관제 개정 때 폐지하고, 성곽수리는 공조로, 소방업무는 한성부로 옮겨졌다. 그 후 1481년(성종 12) 3월 수성금화사로 다시 설치했다가, 조선 후기에 폐지했다.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는 궁궐이나 도성의 보수, 개축과 도성 내에서 발생한 화재의 진압을 담당하였던 관청이다. 오늘날의 소방서와 비슷한 개념이다. 화재 진압을 위해 만들어진 멸화군(滅火軍)을 운용하였다.

수성금화사는 정4품아문으로 궁성·도성의 성곽수리와 궁궐·민가 등의 소방에 관한 일을 맡았다. 관원은 도제조 1명, 제조 2명,

2) 김형중, 1998, 『한국중세경찰사』, 수서원, 112쪽.

제검 4명인데, 그 중 3명은 사복시정·군기시정·선공감정이 겸하였다. 그리고, 별좌 6명이 있었는데, 그중 4명은 의금부경력과 병조·형조·공조의 정랑 각 1명이 겸하였다. 또한 별제 3명이 있었는데, 그중 1명은 한성부판관이 겸하였다³⁾.

3) 갑오경장 이후의 소방업무

오늘날 소방업무는 1975년 8월 26일 치안본부 소방과를 폐지하면서 소방업무가 독립이 되어 지금은 소방방재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소방 업무도 경찰의 고유 업무였다.

갑오경장 이후, 소방행정은 경찰의 임무영역으로서 수행되었다. 즉, 경찰의 임무영역은 감옥경찰, 위생경찰, 소방경찰, 영업경찰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에 미쳤다.

(1) 경무청

조선에 처음으로 경찰의 창설을 결정한 것은 1894년 6월 27일 일본각의(日本閣議)에서 이다. 조선의 개혁대상 중 하나로서 경찰제를 둘 것을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은 당시 일본 공사를 통해서, 조선정부에 「내정개혁방안강목(內政改革方案綱目)」으로 전달되었다. 즉, 「京城 및 重要都市에 완전한 警察을 설치할 것」을 통하여 2년 이내로 실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김홍집내각(金洪集內閣)은 1894년 6월 28일(음력) 「각아문관제(各衙門官制)」에서 「법무아문 관리사법행정경찰(法務衙門 管理司法行政警察)」이라고 정하면서, 경찰을 법무아문(法務衙門)하에 창설할 것을 정하였다. 그러나 1894년 7월 1일(음력) 「경무관제·직장(警務官制·職掌)을 의정한 후 내무아문(內務衙門)에 소속(所屬)시키

3) 김형중, 1998, 『앞의 책』 302쪽.

는 건」에서는 경찰을 내무아문소속으로 변경시켰고, 1894년 7월 14일(음력)에는 「경무청관제직장(警務廳官制職掌)」과 「行政警察章程」을 제정하였다. 경무청관제직장(警務廳官制職掌)」과 「行政警察章程」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의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⁴⁾. 따라서 이 시기의 경찰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이라 할 수 있는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쳐서 한성부에 경무사를 장으로 하는 경무청을 창설하여, 한성부 내의 경찰·감옥사무를 총괄하도록 하였고, 범죄인을 체포·수사하여 법사에 이송토록 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한국 최초의 경찰작용법이라 할 수 있는 『행정경찰장정』은 일본의 1875년 행정경찰규칙을 한문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한 경무청의 설치로 형식상 행정과 경찰의 분화는 이루어졌으나, 경찰 직무범위는 위생·영업·감옥, 그리고 소방업무영역 등 포괄성 및 광범성으로 인해 경찰업무와 일반행정과의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다.

(2) 내부체제

1894년 11월 20일, 『내정개혁요구』를 근거로, 경찰고문관제도가 실시되었다. 경찰권을 하나로 하자는 경찰의 통일성을 요구하고, 일본의 경시를 경무청의 고문관으로 초빙하여 조선의 경찰제도를 일본식으로 하도록 요구하였다.

1895년 2월 26일, 『내부관제(칙령53호)』를 근거로, 중앙에서는, 내부관제가 제정되어 주현국을 지방국으로 개칭하고 행정·감

4) 허남오, 2003, 『한국경찰제도사』, 동도원, 206~208쪽.

육·고등경찰에 관한 사항을 그 임무로 하도록 하면서 비로소 내무대신 아래에 경찰관제의 내국을 설치하게 되었다. 이때 경무청 총무국장은 경무청의 장인 경무사를 거치지 않고 경무서장. 감옥서장에게 지시할 수 있었으며, 경무관인 감독관을 3인 이내로 뒤 각 지방의 경찰사무를 시찰할 수 있어 단순한 수도경찰의 경계를 넘고 있다.

지방에서도, 지방관제에 의해 관찰사 휘하에 경찰을 파견하였고, 이들을 내무대신의 지휘를 받아 관찰사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내무대신과 경무사의 명확한 지휘.감독관계가 확립되었다.

1895년 4월 29일, 『경무청관제(칙령85호)』를 근거로 한 경무청 관제직장의 개정에서, 경무청의 장으로는 경무사가 있어 책임관으로 보좌하고, 그는 내무대신의 지휘를 받아 한성5부의 경찰업무, 감옥업무, 소방사무를 총괄했으며, 그 외 각 부지서를 관할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때, 한말 근대 법령 자료집에 근거하면 12개의 경무청 사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 ① 행정경찰에 관한 사항
- ② 사법경찰에 관한 사항
- ③ 정사 및 풍속에 관한 출판물과 집회 및 결사에 관한 사항
- ④ 영업 및 풍속경찰에 관한 사항
- ⑤ 수화 소방에 관한 사항
- ⑥ 도로경찰에 관한 사항
- ⑦ 위생경찰에 관한 사항

5) 경찰청, 1994, 『한국경찰사 I』, 경찰청, 349~351쪽

또한, '경무지서'는 새로운 관제에서 '경무서'로 승격하고, 궁내 경무소도 신설하여, 서장을 경무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1895년 5월 26일, 『지방관제(칙령101호)』를 근거로, 한성부 외 22개 부에 관찰사 1인, 경무관 1인, 경무관보 1인, 총순2인을 배치하여 관찰사 휘하에 경찰을 파견하였고, 이들을 내무대신의 지휘를 받아 관찰사가 관리하도록 하였다⁶⁾.

4) 광복 이후의 소방업무

(1) 경무국

1945년 10월 21일에 군정청은 경무국을 창설하여 관방, 총무과, 수사과, 통신과를 두고, 지방에는 도지사 밑에 경무부를 두어 경무과, 보안과, 형사과, 경제과, 정보과, 소방과(경기도에 한함), 위생과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경찰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1945년 12월 27일 경무국 고문인 매글린(W. H. Maglin) 헌병대령이 서명한 『조선국립경찰의 조직에 관한 건』을 보면, 먼저 제1항에서 조선인 경무국장은 조선내 전 경찰의 최고사령관임을 명시하고, 제3장에서는 각 도 경무부장은 그 도내에서 법률과 질서를 유지하고 경찰에 부과된 직무를 완수함에 있어 도지사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도지사는 이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시를 각 경무부장에게 할 수 있으나, 도지사는 경찰의 조직, 관리, 수속, 재정, 인사에 관한 명령을 발할 권한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 제8항에서 도지사·각 경무부장, 시장·시경찰책임자는 이 경찰체제를 원활히 운영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제 9항에서 '지방분권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중앙집권적 통할을 하는 것이 현 경찰조직의 관건이며, 이것은 각자 관할지역에서 통치기관으로서 그 임무

6) 허남오, 2003, 『앞의 책』, 205~210쪽.

를 다하는데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찰로서의 필요한 부속기관의 특징을 가진 조직체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2) 경무부와 소방부

1946년 1월 16일 『경무부에 관한 건의』반포에 의하여 경찰의 조직·직능·정원·관명 등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조직편성은 경찰행정권을 도지사의 권한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경찰부를 설치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한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조정을 위해 1947년 9월 11일부로 경무부장이 『경찰행정운영개선에 관한 건』을 지시하였다⁷⁾).

지방경찰기구로서 1946년 4월 1일 일대 개편을 단행하여 종전의 각 도경찰부가 관구경찰청으로 개칭되었고, 각급 일선 경찰서는 지명위주의 서명에서 구번호별로 바뀌게 되었다. 이 개편으로 8개의 관구경찰청이 생겼으며, 경찰계급의 호칭도 바뀌어 경찰부장이 경찰청장으로, 경찰부차장이 경찰부청장으로 변경되었다⁹⁾).

한편, 미군정기인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중앙에 소방위원회가 있었고 지방에는 각 도별 소방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즉, 소방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946년 4월 10일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의 창설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각 시·읍·면의 감독과 운영아래 독립된 소방부를 창립하고, 종래 경찰에서 취급하던 소방부의 운영 및 관리를 이관 시켰다. 또한 상무부 토목국내에 중앙소방위원회를 두고, 각 도에는 도소방위원회를 창설하여, 이들로 하여금 소방예산을 작성하게 하여 소화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장비의 규격화와 시·읍·면 소

7) 경찰청, 1994, 『한국경찰사Ⅱ』, 경찰청, 271쪽.

8) 신상준, 1997, 『미군정기의 남한행정체제』, 한국복지행정연구소, 267쪽.

9) 경찰청, 1994, 『한국경찰사Ⅰ』, 경찰청, 941~944쪽 참조.

방부의 조직적 계획, 소방에 대한 급수 및 용수배급·화재경보와 전달제도 등을 연구하게 함으로서 소방을 경찰로부터 분리시켰다.¹⁰⁾

5)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소방업무

(1) 내무부 치안국

대한민국 정부조직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법률제 1호로 제정된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하였다. 동법 제15조는 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 선거, 치안, 소방, 도로, 교량하천, 수도, 건축과 통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전항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국, 치안국, 토목과 통계국을 둔다고 하였다¹¹⁾.

이리하여 미군정하 남조선 과도정부경찰의 최고 조직인 경무부는 새로운 행정조직의 체제속에서 내무부 치안국으로 축소되었다. 미군정하의 部(즉, 국무부서)가 대부분 대한민국의 부로 계승되었지만, 경무부는 내무부의 하나의 국으로 예속되었다.

1948년 11월 4일 내무부 직제가 마련되고, 이에 근거하여 치안국이 설치되었고, 경무과, 보안과, 경제과, 사찰과, 수사지도과, 감식과, 통신과, 여자경찰과, 소방과의 9개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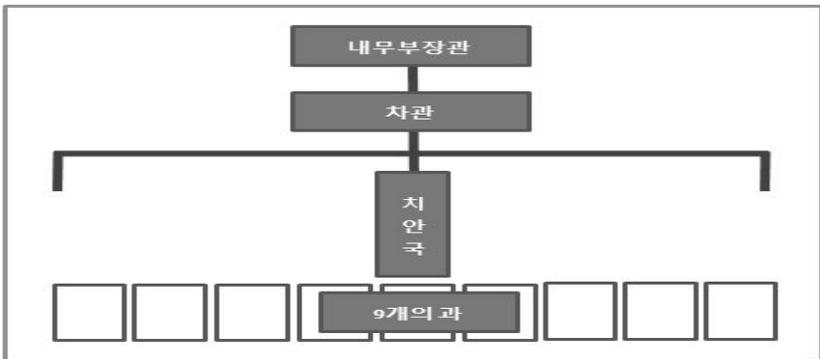
경찰이 내무부에 예속됨에 따라 각 시·도의 경찰국은 시장 또는 도지사의 보조기관이 되어, 서울시장과 도지사는 각 관구 경찰청을 인수하게 되었다. 지방경찰의 인수가 이루어지고 경찰의 계통은 치안국·시·도경찰국·경찰서로 단순화되었으며, 정부는 또한 미군정 때부터 번호에 의하여 호칭되던 경찰국과 경찰서의 명칭을 1949년 2

10) 허남오, 2003, 『앞의 책』, 281쪽

11) 신상준, 1997, 『앞의 책』, 268쪽.

월 23일을 기하여 지명에 의하여 부르도록 개정하였다. 즉, 종래, 『경기도지사-제1관구경찰청』 관계는 『경기도지사-경기도경찰국』의 관계로 변화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앙에는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가 신설되었고, 지방에는 경찰국 소방과·소방서가 설치되었다.



<그림 2 - 1 > 내무부 치안국 기구

(2) 치안본부

1974년 8·15저격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경찰활동의 강화를 재인식하여 1974년 12월 24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종전의 내무부 치안국을 내무부 치안본부로 개편, 치안본부장을 별정직으로 하여 차관급으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치안본부에 제1부, 제2부, 제3부를 두고, 치안본부장을 치안총감으로, 각 부장을 치안감으로 보좌하도록 하였다. 치안본부로 승격되긴 했으나, 여전히 내무부산하에 있는 기구로서 조직의 독립성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다.

지방경찰의 경우, 대구직할시 경찰국, 인천직할시 경찰국이 각각

1981년, 1987년에 설치되었고, 경찰국장 직급도 부산(1978년), 경기(1982년), 전남(1986년), 충남(1988년) 등 순차적으로 치안감으로 격상되었다.

(3) 소방본부 이관

1975년 월남사태로 빚어진 국내외 정세는 긴장상태를 초래하였고, 북한의 남침야욕에 대하여 국민총력전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는 취지로 우리나라에서 민방위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1975년 8월 19일 내무부는 민방위본부신설에 따른 내무부직제 개정령을 마련하고, 국무회에 상정했다. 그 내용을 보면, 차관 밑에 민방위본부를 두고, 그 아래에 민방위국과 소방국을 두고, 민방위국에는 기획과 교육훈련과 운영편성과, 민방위시설과를 설치하고, 소방국에는 소방과, 방호과, 예방과를 각각 두도록 하였다. 또 각 시도에도 민방위국을 두고, 시군에는 민방위과를 두도록 했다¹²⁾.

한편, 치안본부의 방위과와 소방과를 없애고, 작전과를 신설하며, 서울시 경찰국의 방위과를 작전과로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내무부에 민방위 본부를 설치하고, 1975년 8월 26일자로 치안본부의 소방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민방위본부 소방국에 이관하였다가 그 후 소방본부로 개칭되었다.

이로써 그 동안 경찰에서 관장하던 소방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었으며, 내무부 소방본부에서는 총괄적 지휘만 하고,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지방행정기관의 지휘를 받아 소방행정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¹³⁾

12) 동아일보 1975년 8월 19일자.

13) 한국소방안전신문, 2011, 한국 소방제도의 역사적 배경 : 근세 소방제도의 발전시대 마련, 한국소방안전신문 통권 65호, 90~93쪽.

1992년 이후 소방업무를 시·도 책임으로 일원화하여 1992년 4월 도별 소방본부가 설치되었고, 소방공무원의 신분도 1995년 1월 시·도 지방직으로 전환하였다.

2. 한국 소방행정의 발전과정

1) 소방방재청의 설립

(1) 설립목적

2004년 3월 11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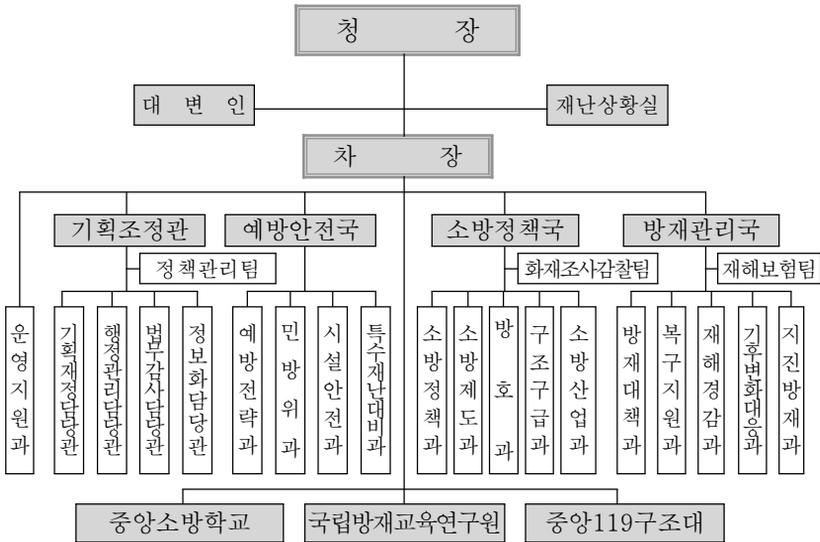
그리고 2004년 6월 1일에는 1관, 3국, 19과, 4개의 소속기관을 가진 소방방재청이 개설되었다. 소방방재청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¹⁴⁾.

- 재난관련 업무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재난관리 전담기능 강화
- 재난예방에 대한 인식제고 및 예방투자 강화
- 구조, 구급 및 현안수습 등 현장대응 체제강화
- 자치단체의 재난 관리기능 및 민관 협조체제 강화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 예방활동체제 확립

(2) 조직

조직은 1관, 3국, 21과, 3팀, 3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기구는 다음과 같다¹⁵⁾.

14)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nema_cms_iba/main)



<그림 2-2 > 소방방재청의 조직기구

(3) 인 원

총 인원은 554명이며, 이중 본청 344명, 소속기관 210명이다.

<표 2-1 > 소방방재청의 인원¹⁶⁾

※소방공무원 222명(본청 85, 소속137)

구분	계	정무	공판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이하	별정	기능
계	554	1	5	5	14	19	80	153	2	6	16	25	173	16	39
본청	344	1	3	5	11	19	55	123	1	6	12	12	54	7	35
소속	210		2		3		25	30	1		4	13	119	9	4

15)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nema cms_iba/show_nema)

16) 소방방재청, 2010, 「2010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소방방재청 참조.

(4) 재정현황

재정현황은 <표 2-2 > 와 같다.

< 표 2-2 > 소방방재청의 재정현황¹⁷⁾

(단위 : 억원)

구 분	'09	'10	'11	'12	'13
□ 재정사업 합계	6,962	7,313	6,468	6,566	6,447
○ 총지출	6,962	7,313	6,468	6,566	6,447
(전년대비증가율, %)	86.6	5.0	△11.6	1.5	△1.8
○ 총 계	6,962	7,313	6,468	6,566	6,447
(전년대비증가율, %)	86.6	5.0	△11.6	1.5	△1.8
□ 총지출 구분	6,962	7,313	6,468	6,566	6,447
○ 인건비	330	346	370	396	423
(전년대비증가율, %)	2.2	4.8	6.9	7.0	6.8
○ 기본경비	107	113	112	115	118
(전년대비증가율, %)	△6.1	5.6	△0.9	2.7	2.6
○ 주요사업비	6,525	6,854	5,986	6,055	5,906
(전년대비증가율, %)	98.1	5.0	△12.7	1.2	△2.5
□ 예산	6,962	7,313	6,468	6,566	6,447
○ (총)지출	6,962	7,313	6,468	6,566	6,447
(전년대비증가율, %)	86.6	5.0	△11.6	1.5	△1.8
○ 총계	6,962	7,313	6,468	6,566	6,447
(전년대비증가율, %)	86.6	5.0	△11.6	1.5	△1.8
【일반회계】	1,358	4,787	4,475	4,389	4,540
· (총)지출	1,358	4,787	4,475	4,389	4,540
(전년대비증가율, %)	△7.7	252.5	△6.5	△1.9	3.4
· 총계	1,358	4,785	4,475	4,389	4,540
(전년대비증가율, %)	△7.7	252.5	△6.5	△1.9	3.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902	2,072	1,889	1,882	1,904
· (총)지출	1,902	2,072	1,889	1,882	1,904
(전년대비증가율, %)	184.3	9.0	△8.8	△0.4	1.2
· 총 계	1,902	2,072	1,889	1,882	1,904
(전년대비증가율, %)	184.3	9.0	△8.8	△0.4	1.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3	3	3	3
· (총)지출	-	3	3	3	3
(전년대비증가율, %)	-	균특인수	0	0	0
· 총 계	-	3	3	3	3
(전년대비증가율, %)	-	균특인수	0	0	0

17) 소방방재청, 2010, 「앞의 보고서」참조.

구 분	'09	'10	'11	'12	'1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648	-	-	-	-
· (총)지출	3,648	-	-	-	-
(전년대비증가율, %)	129.6	일반·광특이관	-	-	-
· 총 계	3,648	-	-	-	-
(전년대비증가율, %)	129.6	일반·광특이관	-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54	451	101	292	-
· (총)지출	54	451	101	292	-
(전년대비증가율, %)	순증	735.2	△77.6	189.1	-
· 총 계	54	451	101	292	-
(전년대비증가율, %)	순증	735.2	△77.6	189.1	-

※ '09년은 예산 기준, '10년 이후는 부처 예산요구안(기금운용계획요구안)에 포함된 요구 및 전망치를 사용

2) 소방방재청의 발전과정

소방방재청이 설치된 이후, 소방행정의 발전과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⁸⁾.

(1) 2004년 :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의 출범

2004년 11월 24일 「안전관리현장」이 선포되었고, 12월 4일에는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12월 20일에는 한국재난 안전네트워크가 출범하게 된다.

(2) 2005년 :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설치

1월 27일에는「자연재해대책법」전문이 개정되었고, 4월 1일에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가 전국 168개 소방관서에 설치되었다.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이 실시되었으며, 5월 15일에는 CBS 휴대폰 긴급재난문자방송서비스가 전국적으로

18)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의 연혁을 참고로 하여 재정리함.

시행되었다.

9월 1일에는 팀제조직으로 개편되는데, 그 결과 4본부, 1실, 2관, 22팀, 4소속기관으로 되었다.

(3) 2006년 :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설치

3월 3일에는 「풍수해보험법」이 제정되었고, 3월 6일에는 국립방재연구소와 민방위교육관을 통합하여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이 설치되었다. 3월 24일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7월 1일에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4본부, 1실, 2관, 2단, 21팀, 3소속기관으로 된다.

(4) 2007년 : 재해지원 및 예방 관련 법률 제정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5.14~5.16)하였는데,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7월 19일에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되었고, 이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7월 27일),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8월 3일)이 각각 제정되었다.

(5) 2008년 :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신설

3월 28일에는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되었고, 4월 1일부터는 풍수해보험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즉, 종전에 31개 시,군,구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6월 5일에는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되었다. 6월 5일에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1관 3

국 21과 2팀 3소속기관으로 개편되었는데, 특히,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를 신설하여, 기후변화대응과, 특수재난대비과를 신설하였다. 12월 8일에는 구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 기술원으로 변경하여 설립하였다.

(6) 2009년

3월 5일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였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였다. 그리고 8월 11일에는 UN 방재연수원, UN ISDR 동북아시아사무소가 개소하였다.

Ⅲ. 부산 소방행정의 역사와 발전과정

1. 부산 소방행정의 역사

부산 소방은 1897년 10월 1일 부산거주 일본인이 재산을 화재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50명의 인원으로 부산 소방조를 편성 운영한 것이 시초이다.

그리고 1939년 관설 부산소방서가 설치되었다가 1945년 광복과 더불어 왜인으로 부터 소방시설 및 장비일체를 인수 소방인원 115명과 소방차량 24대로 미군 소방대와 합동 소방본부를 설치하였다. 1946년 4월에는 군정 법령 제66호로 도청에 소방청이 설치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 소방청은 폐지되고 경상남도 경찰국에 소방과가 설치되어 경찰행정과 통합하였다. 그 후 부산시가 부산직할시로 승격된 1963년도에는 소방서 2개(부산소방서, 북부산소방서), 소방파출소 14개, 인원 230명, 소방차 38대, 소방정 2

적을 보유하게 되었고, 부산직할시 경찰국 경비통신과내에 소방계를 두어 소방업무를 관장한 바 있다.

부산의 직할시 승격 이후, 시세의 확장과 소방여건의 변천으로 대형화재 발생 등 소방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 장비, 인력을 점차 증강하여 오던 중 소방업무가 1970년 8월 30일 지방자치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1972년 6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 및 도와 부산시의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거 부산직할시 소방본부가 발족되었다. 따라서 소방본부장이 경찰국장의 소방사무를 인수 받음으로써 단순한 내부 보조기관이 아니라 시장의 명을 받아 관내 소방사장을 직접 지휘하여 소방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외부 집행기관으로 2과(소방행정과, 방호과) 5계 1실의 소방조직으로 출발하게 되었다¹⁹⁾.

2006년 7월 12일에 부산, 울산, 경남의 오랜 숙원이었던 부산소방학교를 신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게 되어 지역 안전지킴이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2,548명의 소방공무원이 1본부, 1소방학교, 11소방서, 53 119안전센터, 12구조대, 1항공대, 2소방정대, 55구급대의 조직으로 편성되어 소방차 360대, 소방정 3척, 소방헬기 2대 등 365대의 소방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1년 10월 현재, 2,569명의 소방공무원이 1본부, 1소방학교, 11소방서, 53 119안전센터, 12구조대(1특수구조대), 1항공대, 2소방정대, 55구급대의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다.

19)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68년, 『부산 略史』, 부산시사편찬위원회 참조.

2. 부산소방행정의 발전과정

1) 1945년 광복이전의 변화

1987년 10월 1일 부산소방조가 인원 50명으로 발족하였다. 1939년 4월 1일에는 부산소방조를 관설 부산소방서로 개편하였고, 영도, 부민 그리고 부산진 출장소를 신설하였다. 1944년 12월 5일에는 부산소방서 청사를 신축하였다.

2) 1945년 광복이후의 변화

1945년 우리나라의 광복과 더불어 경상남도 소방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그리고 1947년 4월 1일에는 미군정청 산하 경상남도 소방청이 설치되어 운영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과 동시에 소방기관을 경찰기관으로 통합하고, 경상남도 경찰국에 소방과를 신설하게 되었고, 이전의 경상남도 소방청은 폐지되었다.

1954년 12월 8일에는 부산 지역에 북부산 소방서와 부전출장소가 신설되었다. 이어 1955년 1월 17일에는 부산소방서 자성대출장소가 신설되고, 5월 26일에는 북부산소방서 해운대출장소가 신설되었으며, 8월 9일에는 해안경비대로부터 소방정 2척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1956년 12월 31일에는 부산 소방서 산하에 괴정출장소가 신설되었고, 1961년 4월 7일에는 부산소방서 산하에 창선출장소, 충무출장소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1962년 12월 31일부로 부산소방서를 부산중부소방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북부산소방서를 부산북부소방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3) 부산직할시 승격 이후의 변화

1963년 1월 1일부로 부산시가 부산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부산직할시 경찰국 경비통신과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년 5월 8일에 부산북부소방서 구포파출소를 신설하였고, 7월 11일에는 부산 중부소방서 직할 파출소를 대창동 파출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부산 북부소방서 직할파출소를 범성파출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²⁰).

1966년 8월 4일에는 부산중부소방서 부두파출소가 신설되었고, 11월 2일에는 부산북부소방서 해운대출장소를 해운대파출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그리고 12월 27일에는 부산중부소방서를 현재의 위치인 중앙동으로 신축 이전하였다.

1967년 6월 1일에는 부산동래소방서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7월 7일에는 부산동래소방서 동래파출소를 수복파출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1월 9일에는 부산중부소방서 대창동파출소를 중앙동출장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1968년 6월 18일에는 부산동래소방서 양정파출소를 신설하였고, 1969년 9월 12일에는 부산중부소방서 초량파출소를 신설하였다. 1971년 11월 11일에는 부산북부소방서 가야파출소와 부산동래소방서 반송차출소를 신설하였다.

4) 부산직할시 소방본부 발족 이후의 변화

1972년 6월 1일에 부산직할시 소방본부가 발족하게 되었다. 이것은 부산소방행정 활동의 양적·질적 확대를 가져왔다. 특히, 소방행정의 범위가 보다 넓어지고, 기능도 다양화 되어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1974년 4월 18일에는 동래소방서 광안파출소가 신설되었고,

20)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68년, 『앞의 책』참조.

1976년 1월 17일에는 북부소방서 삼락파출소가 신설되고, 가야출장소를 사상파출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광안파출소를 수영파출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1978년 2월 9일에는 북부소방서 향만파출소가 신설되었다.

1979년 5월 1일에는 북부소방서를 신설하였는데, 이전의 북부소방서는 부산진소방서로 개칭을 하였다. 그리고 대저파출소를 신설하여 북부소방서에 편입시켰다. 8월 6일에는 부산진 파출소를 수정파출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1980년 7월 3일에는 중부소방서 청학파출소를 신설하였고, 12월 4일에는 부산진소방서 대연파출소를 신설하고, 동래소방서 동상파출소를 신설하게 된다.

1981년 7월 11일에는 향만소방서가 신설된다. 1982년 6월 10일에는 중부소방서 산하에 하단 파출소와 다대 파출소를 신설하였고, 이어 부산진소방서 산하에 가야파출소를 신설하게 된다. 1983년 7월 23일에는 중부소방서 장림파출소를 신설하였으며, 12월 12일에는 소방약대를 폐지하였다. 1984년 6월 30일에는 동래소방서 남산파출소를 신설하고, 사하소방서를 새롭게 신설하게 된다. 그리고 부산진소방서 산하에 부암파출소를 신설하게 된다. 1986년 9월 12일에는 소방본부 방호과 소방교육대를 신설하게 된다, 또한 12월 10일에는 동래소방서 산하에 우동파출소를 신설하게 된다. 1987년 11월 18일에는 사하소방서 산하에 감천파출소를 신설하고, 11월 24일에는 부산진소방서 적기파출소를 감만파출소로 그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1988년 3월 1일에 중부소방서 119특별구조대를 신설하였다. 9월 12일에는 해운대소방서 우동파출소를 신설하고, 해운대파출소를 중동파출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1989년 5월 15일에는 부산진소방서, 동래 소방서, 북부소방서

에 방호과 지도계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1990년 2월 21일에는 동래소방서 사직파출소와 북부소방서 화명파출소를 신설하고, 향만소방서 향만파출소를 좌천파출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부산시 소방본부와 중부·사하·해운대·향만소방서에 방호과 지도계를 신설하였다. 1991년 5월 30일에는 북부소방서 산하에 주례파출소, 모라파출소를 신설하고, 부산진소방서에 119특별구조대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12월 13일에는 소방본부 방호과에 소방항공대를 신설하였다. 1992년 7월 7일에는 동래소방서 부곡파출소를 신설하고, 해운대소방서에 반여파출소를 신설한다.

1993년 6월 30일에는 금정소방서를 신설하였고, 10월 27일에는 동래소방서 119특별구조대를 신설한다. 1994년 5월 11일에는 북부소방서 학장파출소를 신설하고, 해운대소방서 송정파출소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12월 14일에는 금정소방서 방호과 지도계를 신설하였고, 북부소방서 119특별구조대를 신설하였다. 12월 31일자로 부산소방본부는 구조구급과를 신설하였고, 이어 부산진·동래·북부소방서에도 구조구급과를 신설하였으며, 중부·사하·해운대·금정·향만소방서에 구조구급계를 신설하였다. 1995년 3월 1일자로 해운대소방서 기장파출소가 경상남도로부터 편입되었다. 1996년 1월 1일 남부소방서 광안파출소, 향만소방서 소방정대를 신설하고, 각 소방서별 산하파출소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동래소방서 수복파출소 → 수안파출소,
 북부소방서 사상파출소 → 감전파출소
 사하소방서 장림파출소 → 신평파출소,
 금정소방서 동상파출소 → 서동파출소,
 남부소방서 수영파출소 → 망미파출소,
 향만소방서 영도파출소 → 영선파출소

1998년 1월 1일에는 해운대소방서 좌동파출소를 신설한다.

5) 2000년 이후의 변화

2000년 1월 1일부로 남부소방서 용당파출소가 신설되었고, 2001년 1월 1일에는 사하소방서 신호파출소가 신설되었다. 9월 6일에는 동래소방서 연산파출소가 신설되었고, 9월 25일에는 부산소방본부가 중앙동에서 연산동으로 이전하였다. 12월 27일에는 소방본부 정보통신계와 특수구조대가 신설되었다. 2004년 3월 11일에는 북부소방서 금곡파출소와 향만소방서 동삼파출소가 신설되었다. 2005년 1월 1일에는 동래→해운대소방서 화재조사계가 신설되었고, 10월 19일에는 소방본부에 대응기획계가 신설되었고, 중부·사하·해운대·금정소방서에 구조구급과가 신설되었으며, 부산진소방서 산하에 당감파출소가 신설되었다.

2006년 7월 12일에는 부산소방학교가 신설되었고, 2007년 6월 6일에는 기구와 명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소방파출소 → 119안전센터,
- 119구조대 → 구조대 등
- 범성소방파출소 → 범일 119안전센터
- 좌천소방파출소 → 부두 119안전센터
- 소방정대 → 소방1정대
- 부두소방파출소 → 소방2정대

2008년 1월 1일에는 강서소방서 산하에 강동119안전센터를 신설하였고, 소방본부 방호과 홍보계를 신설하였으며, 강서·향만소방서에 각각 구조구급과를 신설하였고, 중부·사하·금정·강

서·항만소방서에 화재조사계를 신설하였다.

2010년 2월 17일에는 기장소방서를 신설하고, 이와 함께 기장 119구조대도 신설되었다. 그리고 7월 6일에는 소방본부에 1과를 축소하고, 본부 혁신기획팀장, 종합상황실장, 특수구조단장을 신설하여 3과에서 2과 1팀 1실 1단으로 개편하였다.

IV. 부산 소방행정의 현황과 실태분석

1. 부산 소방행정의 현황

1) 관할구역

부산 소방행정의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

<표 4-1> 부산 소방행정의 관할구역²¹⁾

구분	면적(km ²)	인구(천명)	세대수(천세대)	비고
중부소방서	19.26	207	86	
부산진소방서	34.90	486	186	
동래소방서	30.86	535	193	
북부소방서	74.14	580	204	
사하소방서	40.89	365	130	
해운대소방서	52	389	153	
금정소방서	76.47	313	115	
남부소방서	33.70	419	154	
강서소방서	180.01	55	22	
항만소방서	16.18	158	60	
기장소방서	218.05	89	35	
총계	983.27	3,653	1,347	

21) 부산소방본부 홈페이지(http://119.busan.go.kr/00_main/index.jsp) 참조

11개 소방서에서 약 983.27km²의 면적을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인구 365만 3천명에 134만 7천세대를 관할하고 있다.



<그림 4-1 > 관내 현황

2) 소방조직

소방조직은 1본부, 1소방학교, 11소방서, 53 119안전센터, 12구조대(1특수구조대), 55구급대, 1항공대, 2소방정대로 구성되어 있다²²⁾.

본부조직은 2과 (소방행정과, 예방대응과) 1팀, 1실, 1단, 14담당, 3대이며, 소방학교는 2과 1단 4담당이며, 11소방서는 3과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재난대응과) 13담당이고, 119 안전센터는 53개 센터이며, 소방서별 5~6개의 센터가 있다. 구조대는 11

22)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2010, 「2010년 주요업무계획」, 제195회 임시회(건설교통위원회) 참조;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2011, 「2011년 주요업무계획」, 제206회 임시회(도시개발해양위원회) 참조

개대이고, 구급대는 55개대이며, 소방정대는 2개대이다. 특히 항만소방서에는 소방정 3척을 보유하고 있다.

3) 소방력

먼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3년간 소방공무원의 인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2> 2009년 부산소방본부의 인력²³⁾

2009년 1월 16일 현재

계	소 방 공 무 원							기 타		
	소방 본부	소방 학교	소방서	안전 센터	구조대	소방 정대	항공대	일반직	기능직	의무 소방 등
2,415	143	24	441	1,415	192	36	18	2	19	125

<표 4-3> 2011년 부산소방본부의 인력²⁴⁾

2010년 1월 27일 현재

계	소 방 공 무 원							기 타		
	소방 본부	소방 학교	소방서	안전 센터	구조대	소방 정대	항공대	일반직	기능직	의무 소방 등
2,415	143	24	441	1,415	192	36	18	2	19	125

※ 의용소방대원 : 2,540명 (남 1,297, 여 1,243)

23)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2009, 「2009년 주요업무계획」, 제185회 임시회(건설교통위원회) 참조

24)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2010, 「2010년 주요업무계획」, 제195회 임시회(건설교통위원회) 참조;

<표 4-4> 2011년 소방소방본부의 인원현황²⁵⁾

2011년 1월 27일 현재

계	소방직					일반직			
	소계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	소계	선박	전산	기능
2,569	2,548	188	28	509	1,823	21	1	1	19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154개대, 2,540명					13				

2011년 10월 현재, 인원은 소방직과 일반직을 합하여 소방공무원이 2548명이며, 154개대에 2540명의 의용소방소방대원이 있고, 13명의 의무소방원이 있다. 이것은 2010년에 비교하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방장비는 차량 373대, 구조 9,166점, 구급 6,957점, 정보통신 4,787점이며, 장비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5> 소방장비현황²⁶⁾

소 방 차					
펌프차	72	물탱크차	61	고가사다리차	12
굴절사다리차	11	화확차	14	배연차	10
조명(조연)차	9	지휘차	12	재난현장지휘차	1
순찰차	12	진단차	6	항공급유차	1
생화학인명구조차	1	암크레인차	1	다목적인명구조특수차	1
렉카차	1	제독차	1	구조공작차	11
다목적인명구조운반차	1	이동급식차	1	이동안전체험차	2
구조운반차	11	구급차	60	화재조사차	11
구조견차	1	홍보차	1		
기 타					
승용차	25	화물차	13	대형승합	2
소방정	3	소방헬기	2		
계			371		

25) 부산소방본부홈페이지(http://119.busan.go.kr/00_main/index.jsp) 참조

26) 부산소방본부홈페이지(http://119.busan.go.kr/00_main/index.jsp) 참고로 재정리함.

그리고 소방용수는 총 8,231개소(소화전 8,024, 급수탑 28, 저수조 179)이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6> 소방용수 현황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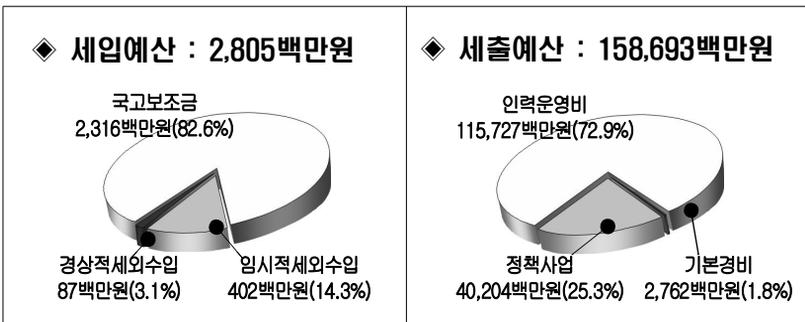
계	공설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8,134	7,925	181	28

또한 비상소화장치 149개소(고지대 59, 저소득층밀집지역 10, 시장·화재경계지구 14, 기타 66)가 있다.

4) 예산

부산 소방본부의 총예산은 2009년 세출예산이 158,693백만원에서 2010년에는 129,510이었다. 그리고 2011년은 173,773백만원(시 일반회계의 3.1%)으로 증가하였다. 그 세부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3> 2009년 부산소방본부의 예산²⁸⁾



27) 부산소방본부홈페이지(http://119.busan.go.kr/00_main/index.jsp) 참조.

28)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2009, 「앞의 보고서」 참조

<표 4-7 > 2010년 부산소방본부의 예산²⁹⁾

구분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		
	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계	자체사업	국고보조사업
금액(백만원)	129,510	125,503	4,007	44,263	40,073	4,190
비율(%)	74.5	72.2	2.3	25.5	23.1	2.4

2009년 세출예산의 경우, 부산광역시市 일반회계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9년과 비교하여 2010년 세출예산의 경우,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8 > 2011년 부산소방본부 예산³⁰⁾

구분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		
	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계	자체사업	국고보조사업
금액(백만원)	129,510	125,503	4,007	44,263	40,073	4,190
비율(%)	74.5	72.2	2.3	25.5	23.1	2.4

5) 안전관리대상³¹⁾

2011년 부산 소방행정의 안전관리대상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소방대상물이 총 68,551개소이며, 방화관리대상이 16,610개소이다.

29)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2010, 「앞의 보고서」참조

30)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2011, 「앞의 보고서」참조.

31) 「위의 보고서」참조.

<표 4-9> 소방대상물 : 68,551개소

근린생활	판매·영업	숙박시설	공 장	노유자시설	기 타
29,270	926	2,502	10,964	1,707	23,182

<표 4-10> 특별관리대상

대 상	개 소	비 고
고층건축물(11층 이상)	5,600	아파트 4,824, 일반건물 776
위험물제조소 등	5,324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대형화재 취약대상	329	대형복합건물 등
화재경계지구	4	국제시장, 남포동건어물상가, 충무동윤락가, 범전동윤락가
특수시설물	271	지하철 터널 전통시장, 복합상영관 등

<표 4-11> 방화관리대상 : 16,610개소

계	1급	2급	공공기관
16,610	874	14,150	1,586

2. 부산 소방행정의 실태분석

1) 화재³²⁾

2008년의 경우, 총 화재 건수는 3,072건으로 주택 923건, 차량·선박 324건, 공장·작업장 256건 등이다. 이것은 전년대비 285건

32)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2009, 「2009년 주요업무계획」, 「2010년 주요업무계획」,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함

이 증가한 것이다. 인명피해는 사상자 145명으로 사망 19명, 부상 126명이다. 이것은 전년대비7명이 감소한 것이다. 재산피해는 재산손실 4,861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56백만원이 감소하였다.

2009년의 경우, 총 화재 건수는 2,941건 으로 비주거용 1097건, 주거용 908건, 기타 936건이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131건이 적은 수치로 4%가 감소하였다. 인명피해는 사상자가 192명인데 그 중 사망이 50명, 부상이 142명로서 지난해에 비해 47명이 증가하여 32%의 증가율을 보였다. 재산피해는 재산손실 6,658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797백만원이 많은 수치로 37%가 증가하였다.

2010년의 경우, 총 화재 건수는 2,403건 으로 비주거용 988건, 주거용 684건, 기타 731건이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538건이 적은 수치로 18%가 감소하였다. 인명피해는 사상자 110명인데 그중 사망 19명, 부상 91으로서 지난해에 피해 82명이 감소하여 43%가 감소하였다. 재산피해는 재산손실 10,540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882백만원이 많은 수치로 58.3%가 증가하였다.

<표 4-12> 연도별 현황(화재)

연도	2008	2009	2010
건수	3,072	2,941	2,403

2) 구조³³⁾

2008년 총 구조건수는 11,173건으로 출동건수는 16,817건이고, 미처리가 5,644건이다. 이것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1,463건이 증가한 것이다. 구조인원의 경우, 5,891명으로 교통사고 1,251건, 화재

33) 「위의 보고서」 참고.

355건, 기타 4,285건이다. 이것은 전년대비 117명이 감소한 것이다.

2009년 총 구조건수는 17,065건으로 이중에서 출동건수가 22,556건이고, 자체처리가 3,978건, 그리고 기타 1,523건이다. 이것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3,133건이 증가하여 22%의 증가를 보인 것이다. 구조인원의 경우, 8,741명인데, 이중 수난사고가 3,117명이고, 실내감힘 인원이 1,555명, 기타 4,069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325명이 감소하여 4%의 감소율이 나타났다.

2010년 총 구조건수는 16,752건으로 이중에서 출동건수가 22,204건이고, 자체처리가 4,143건, 그리고 기타 1,309건이다. 이것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3,313건이 감소하여 1.8%의 감소를 보인 것이다. 구조인원의 경우, 8,418명인데, 이중 수난사고가 3,108명이고, 승강기 사고 구조인원이 1,425명, 기타 3,885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323명이 감소하여 3.7%의 감소율이 나타났다.

<표 4-13> 연도별 현황(구조)

연도	2008	2009	2010
건수	11,173	17,065	16,752

3) 구급³⁴⁾

2008년 기준, 총 구급건수는 90,684건으로 출동건수 130,902건, 미이송 40,218건이다. 이것은 전년대비 3,283건이 증가하였다. 이송인원을 보면, 92,750명으로, 이 중 (질병 56,228명, 교통사고 10,644명, 기타 25,878명)이다. 이것은 전년대비 3,144명이 증가한 것이다.

2009년 기준, 총 구급건수는 97,045건으로 이중 출동건수가

34) 「위의 보고서」통계 참조.

141,732건, 현장처치가 2,663건 그리고 기타 42,024건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6,361건이 증가하여 7%의 증가율을 보였다. 구급인원을 보면, 99,167명으로 질병 59,911명, 교통 11,159명, 기타 28,097명이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6,417명이 증가하여 7%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0년 기준 총 구급건수는 95,845건으로 이중 출동건수가 138,565건, 현장처치가 2,761건 그리고 기타 30,853건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1,200건이 감소하여 1.2%의 감소율을 보였다. 구급인원을 보면, 98,037명으로 질병 55,952명, 교통 11,232명, 기타 30,853명이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1,130명이 감소하여 1.1%의 감소율을 보였다.

<표 4-14> 연도별 현황(구급)

연도	2008	2009	2010
건수	90,684	97,045	95,845

4) 119신고접수³⁵⁾

2008년 재난처리건수는 144,320건으로 전년대비 10,324건이 증가하였다. 이중 화재가 3,856건, 구조가 15,409건, 구급이 117,954건, 기타가 7,101이다. 또 비재난처리건수를 보면, 603,314건으로 전년대비 16,066건이 감소하였다. 이중에서 동시신고가 39,229건, 장난신고가 5,676건, 기관통보가 4,499건, 기타 553,910건이다.

2009년 재난처리건수는 159,496건으로 이중에서 화재는 3,435건, 구조는 18,236건, 구급은 126,614건, 기타 11,211건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15,176건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11%의 증가율을 보

35) 「위의 보고서」통계 참조.

이고 있다. 또 비재난처리건수를 보면, 총 654,508건이며, 이 중에서 동시신고가 37,541건이도, 장난이 3,398건 기타 613569건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51,194건이 증가하여 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재난처리건수는 171,496건으로 이 중에서 화재는 2,731건, 구조는 18,902건, 구급은 124,823건, 기타 25,040건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12,000건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 비재난처리건수를 보면, 총 694,360건이며, 이 중에서 동시신고가 32,203건이도, 장난이 2,077건 기타 660,080건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39,852건이 증가하여 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4-15> 연도별 현황(119신고접수)

연도	2008	2009	2010
건수	144,320	159,496	171,496

4) 종합

이상의 실태를 기준으로 화재, 구조, 구급, 신고접수에 대한 1일 평균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6> 연도별 1일 평균 비교

연도	2008	2009	2010
화재	1일 평균 8.4건	1일 평균 8.1건	1일 평균 6.6건
구조	1일 평균 31건	1일 평균 42건	1일 평균 46건
구급	1일 평균 284건	1일 평균 266건	1일 평균 263건
신고접수	1일 평균 2,042건	1일 평균 2,230건	1일 평균 2,372건

V. 부산 소방행정의 발전과제

1. 예방적 측면 : 선제적·적극적 화재안전 대책추진

1) 초고층건물 화재안전대책 강화

부산 지역의 경우, 50층 이상 초고층건물은 전국 39개소 중 최다인 16개소가 있으며, 전체의 41%를 차지한다. 부산의 고층 건물 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1> 부산지역의 고층건물 현황³⁶⁾

계	11~30층	31~40층	41~49층	50층 이상
5,600	5,430	128	26	16

특히, 부산은 초고층건물 화재안전 대비 부족으로 인한 대형 화재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건축허가 및 소방점검 등 선제적·적극적인 예방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진입로 확보 지연, 첨단진압장비 부족 등 작전상 미비점도 노출되고 있다. 그 실례로서 2010년 10월 1일 해운대구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는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재산피해가 57억에 달하였다³⁷⁾. 따라서 초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진일보한 소방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초고층건물 뿐 만 아니라, 다중운집시설 및 장대해저터널 등 각종 위험요인의 증가와 심화로 기존의 획일화된 화재대응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재분야의 핵심역량 강화로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 대처해야 한다. 이에 대한 향후 해결과제는 다음과 같다.

36)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2011, 「앞의 보고서」참조.

37) 조선일보 2010년 10월 10일자 참조

(1) 신축 초고층건물 건축·소방 안전기준 강화

신축 초고층건물 건축·소방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외벽재의 불연화, 피난안전층의 설치, 소방시설 보완 등 심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2) 자체점검대상의 소방관서 확인 강화

자체점검대상에 대한 소방관서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 부산지역의 자체점검대상은 1,719개소(연면적 5천㎡ 이상, 16층 이상 공동주택)³⁸⁾가 있는데, 민간점검업체 종합정밀점검 표본검사를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특히, 표본 추출시 31층 이상 준초고층건물을 확인대상 우선순위로 선정해야 한다.

(3) 초동 대처능력의 향상³⁹⁾

초동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119자동신고 핫라인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즉, 초고층건물과 소방관서간 자동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건물관계자에 대한 화재대처 요령, 방화관리 실무지식 등 소방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4) 소방훈련의 실효성 향상

대상별 화재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소방훈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준초고층건물 64개소(31층 이상)에 대한 화재대응매뉴얼의 제작 뿐만 아니라, 31층 이상 건물에 대한국위기관리논집한 소방훈련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38)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2011, 「앞의 보고서」참조.

39) 류상일 외 2인, 201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효율적 소방력 개선방향 : 통합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제7권 11호, 148쪽.

2)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 집중관리

<표 5-2 > 부산지역 다중이용업소 등 현황⁴⁰⁾

계	다중이용업소 (15,607개소)				대형화재 취약대상	판매· 영업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	기 타				
19,668	2,696	2,088	2,649	8,174	329	926	304	2,502

부산지역은 많은 다중이용업소들이 있다. 고시원, 실탄사격장⁴¹⁾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비상구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통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영업주·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간이S/P 설치를 확대하고,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등을 통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쪽방형 여인숙 등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계절별, 시기별, 취약요인별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저소득층 안심주택 기반 조성

주택화재는 부산지역 전체 화재건수의 29%, 인명피해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서민주택 기초소방시설 보급사업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세대에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최근 3년간 보급되고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친환경소화기의 보급을 계속 확대시켜서 감지

40) 부산시소방본부 내부자료.

41) 연합뉴스, 2009년 11월 18일: 부산실탄사격장화재로 1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경찰은 부산사격장 참사는 '폭발성 화재'라고 결론낸 바 있다.

기 작동에 의한 초기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택 화재보험 무료가입을 추진하고, 주택 소방안전점검 봉사반을 상설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⁴²⁾.

2. 진압적 측면: 화재 진압작전 능력 향상

1) 화재진압 전술훈련 강화

현장지휘관의 '현장관리 책임성' 이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즉, 지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의 현장상황 판단력 증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현장진입부터 철수까지 현장지휘관 중심체제로 일원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휘역량이 부족하거나, 지휘권을 남용하거나, 지휘하지 않는 지휘관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2) 신속한 출동체제의 확립

신속출동을 위해서는 소방출동로 및 작전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소방출동로 확보대상 구간을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비해야 한다. 특히, 노면에 '긴급차 통행로' 문자표시등을 통하여 신속한 출동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 소방차량전용 황색주차선 표시 및 주·정차 금지도 지도·계도해 나가야 한다.

요컨대, "소방출동로=생명로"라는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인터넷, 언론, 상품마케팅의 활용 등 다각적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42) 임상규, 2011, 소방방재청 자체평가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말콤볼드리지 모델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7권 제1호, 55~63쪽.

3. 시민 협력적 측면 :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

1) 방화관리자의 관리능력 제고

방화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방화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 사례를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수방화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소방검사면제 등을 부여하고, 우수대상을 선정 시상 등의 방안이 있다. 또한 방화관리자 안전지수를 진단하여 그 결과를 활용, 홍보함으로써 방화관리업무의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즉, 안전의식 진단을 통한 방화관리업무 개선이 필요하다.⁴³⁾

2) 민간 대응능력향상

민간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율소방단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특히고지대 등 취약지역의 경우, 지역내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하여 초기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되어야 한다⁴⁴⁾.

또 겨울철에는 시민안전감시단을 운영하여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점검입회를 실시하고, 안전감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3) 안전관리 소방 홍보의 활성화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월별 테마 중심의 체계적·연속적 기획홍보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방송사와의 광고계약 등을 통하여 라디오 캠페인을 실시하고, SMS, E-mail 을 통하여 소방안전관리 실무정보를 제공하거나, 지하철 광고모니터를 활용하여 영상물 상영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43) 이황우, 1989, 「한국소방의 위상과 과제」, 『한국화재학회지』 3권 2호, 한국화재학회, 35~39쪽

44) 이인식 외 4인, 1993, 「광역화 추세에 따른 수도소방행정발전대책」, 『한국화재학회지』 7권 1호 1호, 33~35쪽.

4) 조기 소방안전교육 활성화

지금까지 실시해 온 불조심 어린이마당, 소방동요대회, 119어린이 안전뉴스를 통하여 어린이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 「1학교 1소방관 담당제」를 중점 운영하여, 초·중·고 학교별 안전담당 소방공무원을 지정하고,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119소년단 운영도 내실화하기 위하여 정예조직으로 구성·운영하고, 우수단원 및 지도교사에 대한 표창도 확대해야 한다.

4. 소방행정적 측면 : 소방행정 인프라의 구축

1) 전문 소방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실 운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현재, 신입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등 36과정 68회 3,822명에게 실시되고 있다. 또 해난구조훈련 특성화과정에서는 국제공인 교수요원을 양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고, e-Learning과정 활성화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또한 화재조사요원의 감식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화재조사 전문자격 취득과정이 중앙소방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1년에는 부산소방학교 화재조사관 과정이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하여 현장감식기법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을 강화하고, 화재조사기자재 사용법 및 화재감식 특성화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⁴⁵⁾.

45) 정세욱, 1989,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소방행정의 발전방향」, 『한국화재학회지 3권 2호』, 27쪽.

2) 소방력의 확충

소방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자격자 특별채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⁴⁶⁾. 또한 소방 장비도 보강해 나가야 한다. 특히, 소방차량을 보강하여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화재진압장비의 보강, 구조·구급장비의 보강도 필요하다⁴⁷⁾. 또한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등 소방활동상 취약지역에 대한 소방우수시설도 보강해 나가야 한다.

3) 근무여건개선과 사기진작

직원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부서 전원 3교대 근무를 철저히 실시하고, 노후청사의 현대화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직원 가족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가족포인트를 지급하여 직원의 사기를 높여나가야 한다.

또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 운영을 통하여 특수한 업무환경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질환 진료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현재, MOU를 체결한 병원을 중심으로 부산지역 국공립병원 4~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이를 좀더 넓려나가야 한다. 또한 진료대상인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가족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특히, 소방공무원 진료비 부담 해소를 통한 실질적 후생복리를 도모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본인 및 직계가족의 건강검진비 지원과 병원진료비 후불

46) 이황우, 1989, 「앞의 책」, 35쪽.

47)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2011, 「앞의 보고서」참조; 부산지역의 경우, 2011년에, 고성능펌프차 1대(신규, 14억), 초대형굴절사다리차 1대(교체, 20억)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도입일정은 구매심의회 및 조달계약(1월), 중간검수(6월), 납품배치(11월)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 적용 및 부대시설(장례식장 등)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4) 소방행정 역량평가 종합지수 개발 및 통합관리 추진

주요 평가제도를 일원화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현행 소방행정 역량평가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5-3> 소방행정역량 평가⁴⁸⁾

국정시책 합동평가	화재와의 전쟁	BSC	1등 소방 평가	소방행정 역량평가 (종합지수 관리)
소방력 강화실적 등 2개 지표	화재사망을 저감 등 27개 지표	5분내 현장도착률 등 23개 지표	지식활성화 등 37개 지표	
5분내 현장도착률 등 19개 지표 중복				

앞으로 소방행정 역량평가 종합지수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즉, 평가지표별로 중요도와 품질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S/A/B/C/D 등급)하고, 가중치 부여된 지표 값을 합산하여 역량평가 종합지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VI. 결 론

이상에서 본 연구는 한국 소방행정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 소방방재청이 설립된 이후 우리나라 소방행정이 어떠한

48)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2011, 「앞의 보고서」참조

발전을 거듭해 왔는가를 연도별로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부산 소방행정의 연혁을 설명하고, 부산 소방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광복이전과 광복이후 그리고 부산직할시 승격 이후, 부산소방본부의 발족부터 지금까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부산 소방행정의 현황을 조직, 인원, 예산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부산 소방행정의 실태를 4가지 변수 즉, 화재, 구조, 구급, 119신고접수(재난처리)의 측면에서 지난 3년간의 활동 실태를 설명하고,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부산 소방행정의 향후 발전과제를 예방적 측면, 진압적 측면, 시민협력적 측면, 소방행정적 측면에서 제안해 보았다.

부산의 소방행정은 부산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 부산의 지역적 특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재난 관리적 차원의 소방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소방행정의 예방적 측면으로 매우 중요시 되어야 한다. 그리고 화재를 비롯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행정의 역량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이것은 소방행정의 진압적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방적 측면과 진압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된다. 이를 위한 시민협력 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인력에 대한 사기진작 등 소방행정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소방은 이와 같은 4가지의 요소가 적절히 확립되고, 실천되어질 때, 부산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부산 소방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 경찰청, 1994, 『한국경찰사 I』, 경찰청, 941~944쪽
- -----, 1994, 『한국경찰사 I』, 경찰청, 349~351쪽
- -----, 1994, 『한국경찰사 II』, 경찰청, 271쪽.
- 김형중, 1998, 『한국중세경찰사』, 수서원, 112쪽.
- 동아일보 1975년 8월 19일자.
- 류상일 외 2인, 201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효율적 소방력 개선방향 : 통합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제7권 11호, 148쪽.
-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2009, 「2009년 주요업무계획」, 제1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1~51쪽
-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2010, 「2010년 주요업무계획」, 제19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1~73쪽
-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2011, 「2011년 주요업무계획」, 제206회 임시회(도시개발해양위원회) 1~65쪽.
- 부산시소방본부 내부자료.
-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68년, 『부산 略史』, 부산시사편찬위원회, 34~56쪽.
- 소방방재청, 2010, 「2010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소방방재청, 1~56쪽.
- 신상준, 1997, 『미군정기의 남한행정체제』, 한국복지행정연구소, 267쪽
- 연합뉴스, 2009년 11월 18일
- 이인식 외 4인, 1993, 「광역화 추세에 따른 수도소방행정발전대책」, 『한국화재학회지』7권 1호 1호, 33~35쪽.
- 이황우, 1989, 「한국소방의 위상과 과제」, 『한국화재학회지』 3권 2호, 한국화재학회, 35~39쪽.

- 임상규, 2011, 소방방재청 자체평가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말콤볼드리지 모델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7권 제1호, 55~63쪽.
- 정세욱, 1989,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소방행정의 발전방향」, 『한국화재학회지 3권 2호』, 27쪽.
- 한국소방안전신문, 2011, 한국 소방제도의 역사적 배경 : 근세 소방제도의 발전토대 마련, 한국소방안전신문 통권 65호
- 허남오, 2003, 『한국경찰제도사』, 동도원, 206~208쪽.
- 조선일보 2010년 10월 10일자 참조
- Jennifer Mason, 1996, 『Qualitative Researching』, London : SAGE Publication.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 부산소방본부홈페이지(http://119.busan.go.kr/00_main/index.jsp)
- 부산소방학교(<http://edu119.busan.go.kr>)

투 고	심 사	완 료
2011.10.31	2011.11.30	2011.12.15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부산 소방행정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부산 소방의 발전과제를 논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소방행정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고찰한다. 한국 소방행정의 역사를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한말기, 그리고 광복이후, 대한민국의 수립의 순서로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 소방행정의 발전과정은 소방방재청의 설립을 그 출발점으로 해서 이후 소방행정의 변

화를 살펴본다.

둘째, 부산 소방행정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부산소방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광복이전, 광복이후, 부산직할시 승격 이후, 부산직할시 소방본부 발족 이후, 그리고 2000년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부산 소방행정의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셋째, 부산 소방행정의 현황과 실태분석을 분석한다. 부산 소방행정의 현황은 소방인력, 조직, 예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부산 소방행정의 실태는 지난 3년간의 각 부문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분석해 본다. 즉, 지난 3년간 화재부문, 구조부문, 구급부문, 119신고 접수 부문의 실태를 설명하고, 분석해 본다.

네째, 부산 소방행정의 발전과제를 논의한다. 향후 부산 소방행정의 발전과제를 예방적 측면, 진압적 측면, 시민협력적 측면, 소방행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이에 대한 향후 부산 소방행정의 발전과제를 제안한다.

핵심주제어 : 부산소방행정, 한국소방행정,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

【Abstract】

The study on history of Busan Fire Administration and the development process

Choi, jong sool / Dong-eui Univ.

This paper is the study on history of Busan Fire Administration and we discuss plans of development about Busan Fire Administration.

To achieve purpose of the research, This paper is comprised of as follows:

First, this paper will study the history of Korea Fire Administration and the development process. we consider the history of Korea Fire Administration from the time of Chosun Dynasty, hanmalgi, after independence to Republic of Korea.

This article explains an organization and constitution of the Fire Administration.

Also, we will research the history of Busan Fire Administration and the development process. we consider the history of Busan Fire Administration from the time of Before independence, after independence, Busan Metropolitan City to Busan Metropolitan City Fire Department.

Second, we make an analysis of a main activity in Fire Administration., Status of Busan Fire Administration, Organization, budget. we discuss a main activity of Busan Fire Administration.

Third, At the base of the above analysis, this paper proposes development plans of Busan.

Key Words : Busan Fire Administration, Korea Fire Administration, Busan Metropolitan ity Fire Department. Fire Administration.